# 도의회 광장

2021 05 제73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23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02 제395회 임시회

03/07 주요 이슈

08 생생 의정활동

10 함께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푸른 들판에 눈꽃 세상** 제주섬은 코로나19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여름으로 치닫고 있다. 푸른 들판에 흩뿌려진 눈꽃마냥 정겨움과 시원함을 연출하고 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꿈꾸며 막바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으면 한다. 서귀포시 표선면 보롬왓에서.

## "제주는 방역과 경제 모두 아우른 대책 절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월 28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월 9일까지 13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6조 2,310억 원 규모의 올해 1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올해 본예산 5조8,299억 원 대비 6.88%(4,011억 원) 증가한 추경안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2,255억 원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도 심의한다.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내 집단감염 확진자가 늘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도민사회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고령층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다."면서, "제주 방문 관광객이 월 1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면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과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주도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개회사

# "추경예산안 코로나 대응 손 놨나"

## 제395회 임시회 개회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5회 임시회가 5월 28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에서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갖고 본격 회기에 들어갔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힌 뒤 "추경예산안 규모는 6조 2천31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4천11억 원이 늘어나 6.9% 증액편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873억 원, 회계간 내부거래 969억 원 등의 반영분을 감안한다면 정작 실제 재정투자사업은 2천억 원 정도로 이마저도 각종 도로 보수와 건물 개보수 등 시설비에 908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이에 따라 "코로나 대응 예산도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며 도 자체 편성사업은 극히 미미하다."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추경안 편성 기조에 맞게 재원 배분을 제대로 한 것인지 시설비 등의 연내 집행가능성과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좌 의장은 이와 함께 "31일,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해결을 위해 '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화합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면서, "사업 추진 이후 14년째지만 강정주민들께서 겪는 고통과 후유증은 말로 다 표현 못하고 아직도 사면복권되지 않은 주민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완전한 갈등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강정주민들의 사면복권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미래 강정마을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진정성 있는 실천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속개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각각 들었다.

추경 제출에 따른 인사말

# "추경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력화"

## 원희룡 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월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395회 임시회 2021년 제1회 추경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 당초 예산보다 4011억 원 증가한 6조 2310억 원 규모"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재정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과 신속·정확한 예방접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조성, 생활치료센터 운영, 백신 예방접종 지원 등에 329억 원을 편성했다"며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도민에게 힘이 되고자 지역화폐 추가발행에 135억 원, 고용지원 사업에 147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소규모 농·어가와 자가격리 해제자 등의 생계 지원을 위한 예산도 214억 원으로 최대한 편성했다"며 "장애인 특별돌봄, 지역아동센터 돌봄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에도 3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 "모든 학생에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10만원씩 지급"

## 이석문 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5월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395회 임시회에서 2021년 제1회 추경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에서 "지난해에 이어 도내 유·초·중·고 학생 8만 8,000명에게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격차 해소와 일상 회복의 마중물을 만드는 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며 "1인당 지원 금액은 10만 원으로, 일상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 6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며 "교사들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에서 운영하는 '1수업 2교사제'에 투입돼 담임교사와 협력하며, 세밀한 학습 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모든 학교의 방역 인력을 2학기까지 차질없이 배치해 학교 방역 안전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면서 "원격수업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교육용 스마트 단말을 확대 보급하고, 노후한 무선통신망 장비를 교체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의회·제주도, 강정마을에 지난날 과오 사과

##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가 강정마을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으로 인한 지난날의 과오를 사과하고 마을 상생 화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31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 터미널서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이 열렸다.

이번 선언식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 대한 반성 및 상생 화합 선언을 통해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식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진행하는 공식적인 사과로써, 이를 받아들이고 행정과 강정마을 간 상생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이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정의 지난 과오에 대한 사과와 향후 강정마을과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선언식을 통해 행정과 강정마을 간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공동체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 행사로 아메리카 원주민과 영국 정착민들 사이의 갈등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줄거리 영상이 상영되며, 본 행사 상생 화합 퍼포먼스로 △샌드아트 스토리 및 어린이 합창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및 낙관식 △강정마을-도의회-제주도 상생화합 선언 △참석 내빈 및 마을 주민 등 희망의 메시지 전달 등이 진행됐다.

또한 식후 행사로 서남방파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재탄생한 강정해오름노을길 현장 방문도 이뤄졌다.

주요이슈

4·3특별위원회

# 4·3특별위원회, 4·3유적지 현장 답사

## 4·3유적지 현장 확인 통한 보존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의 4·3유적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유적지 현장 확인을 통한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4·3유적지 2~3개소 현장답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철남 위원장은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단순히 설화(說話)로써 기억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적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4·3사건이 제주의 아픔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이므로 4·3역사의 현장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철남 위원장은 "그런데 제주지역의 4·3유적지는 총 842개가 있는데 그 중 40개가 소실되어 현재 802개의 유적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도시계획 및 건물 신축 등으로 잃어버린 마을 소실도 12곳이나 된다."고 하면서, "이번 4·3유적지 현장방문은 유적지 관리 점검과 함께 이를 다크투어리즘과 연계한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4·3유적지 방문지는 건입동에 소재한 주정공장터와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으로, 5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위 위원과 도청 4·3지원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 4·3평화공원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사진.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95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위령사업을 위해 만든 공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제주4·3특별법이 2000년 제정 시행 이후, 7차례 개정하는 동안 올해 처음으로 전부개정하게 되자 그에 따른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4·3특별법의 조문 변경에 따른 내용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별금지 사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기념관 운영 규정을 반영하였고, 특히 위령재단에서의 추모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표 발의한 오영희 의원은 지난해부터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여러 4·3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가졌고, 그 과정에 "4·3평화공원에 대한 아픈 기억 외에 미래세대의 교육자원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

#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8차 정책토론회로 '바람직한 제주지역 골프산업의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5월 24일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코로나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산업이 요금인상, 불친절, 도민예약 외면 등 골프관광객 및 도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이 '제주 골프장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최영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골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제주지역 골프장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부분적으로 대중제를 전환하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회원수나 입회금의 감소가 없으며, 오히려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회원제 비회원 평균 입장료를 초과하는 곳(제주도 1곳)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입장료 심의위원회의 재설치,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본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성민 위원장은 "골프관광은 제주지역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금혜택 등의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이나, 현재 코로나특수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기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면서, "골프장입장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양경숙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지자체 근로감독권 이양 검토 환영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반영 촉구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사진·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는 최근 평택항 화물적재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고와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근로감독권의 지자체 이양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도입 검토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주자치도에 촉구했다.

근로감독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위법현장을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의회에서 추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근로감독관 사무의 이관'을 제안·최종 반영시킨 바 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근로감독권 사무의 이관'은 특별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제주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위원회 조직과 업무처리의 분리로 인한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 또한 제주로 이양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행정(인사, 복무, 예산 등) 업무는 도의 지휘명령을 받는 반면, 노동행정(조정, 심판, 차별시정 등) 업무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추진계획 등에 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성민 위원장은 "이미 많은 분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수 있으나, 2018년 삼다수 공장 근로자와 용암해수단지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렇듯 제주에서도 연간 1,200건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 사무만 제외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주로 이양된 채로 두어서는 안 되기에, 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이를 반영하였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한 송영길 대표의 결정을 환영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이양받아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제주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제주자치도가 제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이슈

# 지방 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 정책 토론회

## 집행부 우위에서 도민과 의회 중심으로 기관구성 필요
## 참석 교수진, 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의견들 구체적 제시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의원)'는 5월 25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본격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제주형 지방자치의 모델과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1부 '기관융합형 지방자치단체 영·미 사례 소개'를 주제로 영국과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발제한 최경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성공한 모델이라도 외국제도의 무비판적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기관통합형으로 추진할 경우 인사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책임행정관 제도 채택 및 지방의회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부 '제주형 기관통합형 가능한 대안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김태영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논의에 있어 집행부 우위, 지방의회 우위, 집행부·지방의회 대립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원본'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유산인 집행부우위 형태는 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 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 기관 구성 방식의 보편적인 형태는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이라고 주장하며, 제주형 기관 통합 방식에 대해 "의장이 도지사를 겸직하는 것, 그리고 도청 본부의 지역사무소를 많이 만들어서 공직자들이 현장지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고 하면서 "부지사를 전문행정가로 여러명 두고, 그 중에서 역할이 큰 분을 수석부지사 체제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심광호 교수(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는 미국의 의회-시정관리관제를 설명하면서 "유권자가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고, 의회 의원이 자기가 필요한 정책과 법으로 구현된 정책행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을 뽑는 것이 행정학의 이상형"이라고 설명하면서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 법과 정책을 잘 정립할 책임이 있고, 의회가 고용한 전문직 관리자들이 관료제를 잘 이끌어 가면서 그 의회가 만들어준 국민의 목소리를 잘 수행하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고 주장했다.

# 의원 의정활동 도민에게 공개한다

## 의원 의정활동 공개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노형을/더불어민주당)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정방동·중앙동·천지동/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공개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5월 2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도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도민의 알권리 보장, 도민사회 내 신뢰 구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초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은, 크게 공개대상과 공개시기 및 방법, 공개된 내용에 대한 활용과 관련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의정활동 공개는 공개지표에 명시된 입법성과, 지역주민에의 기여도, 공약, 주민소통활동, 지역활동, 의정성과 등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으로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오승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조수진 제주인터넷기자협회장(제주투데이 기자), 선명애 의정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강인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지원팀장이 토론했다.

# 도의회 옴부즈맨 제도 실질적 운영 제고 기대

## 홍명환 의원, 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개정 추진

홍명환 의원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옴부즈맨 운영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 의무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의회 의장에게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옴부즈맨의 업무 성과는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 내 불편 부당한 제도 및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의 명망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옴부즈맨 제도는 지역 내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 제안, 지역개발·도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 개선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옴부즈맨 운영 조례로는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사실상 어려워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언론 지원 제도화 방안 정책토론회

## 제주지역 언론활성화 기반 마련방안 모색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와 한국지역언론학회(회장 최낙진), 제주언론학회(회장 최낙진)는 5월 20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지역언론 지원 제도화 방안과 가능성에 대한 정책토론회(지역언론지원 조례, 과연 필요한가?)'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언론 지원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 2009년 이후 지역언론 지원조례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역언론 지원조례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조례의 성과와 한계, 조례 제정과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운영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로써 지역사회에서 난립하고 있는 지역 언론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정책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낙진 한국지역언론학회 회장은 "지역언론 지원에 대한 공감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연 지원 조례가 최선인가'에 대한 물음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책토론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1주제에서는 '지역언론지원 조례의 운영 경험과 성과: 지역언론의 저널리즘 강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두 개의 발제가 이뤄졌으며, 제2주제에서는 '제주 지역언론지원 조례 제정, 과연 해야 하는가?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 행정자치위원회

# 제주기록원 설치로 기록자치의 기반 마련해야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과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공동주관으로 기록물분야 전문가를 초청, 5월 13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기록원 설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심성보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재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박찬식 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및 강철남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기록원 설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제주기록원 설립운영 방향과 선진모델 제안, △제주기록원 설치에 대한 제언, △제주 기록물 관리의 문제와 대안 등에 대하여 토론이 이루어졌다.

심성보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제주기록원 설치이유, △제주기록원의 기능, △제주기록원 설립방향 등에 대하여 제시했으며, 김재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은 △제주기록원 설립 필요성, △제주도관련 기록물 보존현황과 이용실태,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아카이브 선진사례들, △아카이브의 기능과 건물의 공간구성, △제주기록원 설립에 관한 제안의견 등을 제시했다.

# 제주애향묘지 활성화 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

강철남 의원은 5월 11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애향묘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출생 재외동포 및 배우자, 제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사람 및 배우자 사망시 안장하기 위한 시설로 애향묘지를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애향묘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이용실적이 저조해 사회 및 장묘문화 변화에 맞는 특성화와 개념 재정립 등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황석규 원장은 "현재 안장대상이 재일제주인, 이북5도민, 재외동포 등에 제한되어 있는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녀 및 국제도시의 의미를 포함해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또한 홍보부족으로 기존 안장대상자들도 잘 모르고 있으며, 과거 애향묘지 조례가 별도로 있었는데 현재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되어 관심이 소홀해지고 있어 다시 별도 조례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북5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 송훈 소장은 "제주통일동산 추진이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에 포함되었는데 사실상 무산되었다."면서, "이북5도민 도민회가 2세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점차 활동회원 감소로 애향묘지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3세까지 안장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및 애향묘지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이북5도민회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고광명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재일제주민의 애향묘지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면서, "이용실적 개선을 위해 홍보강화, 매장절차의 간소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실태조사를 통한 유골봉환 필요, 재일제주인 1세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애향묘지 수요조사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철남 의원은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께서 제시해준 의견들은 향후 애향묘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의정자문위 보건복지안전분과 운영회의 열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에서는 5월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임위 위원, 의정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보건복지안전분과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보건복지안전분야 의정활동 및 일반현황, 코로나19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문위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며, 아울러 2021년도 보건복지안전분과위원회 활동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며, 오늘 회의는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중요한 자리로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정자문위원회 보건복지안전분과는 지난해 9월에 새롭게 구성하여 2022년 6월말까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현재 위원수는 6명으로 김원배(분과위원장, 제주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위원장), 강지언(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원장), 고보환(제주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부회장), 김인자(유진어린이집 원장), 이은경(서귀포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관장), 이재기(샛별사랑산악회 고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 취업취약계층 여성 지원 위한 정책 토론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13일 대회의실에 '취업취약계층 여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내 취업취약계층 여성 취·창업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차후 이들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발제는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주 취업취약계층 여성 일자리 정책 이슈와 과제:한부모, 결혼이주, 폭력피해 여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백옥선 서울YM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누리봄쉼터 시설장, 송창윤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영은 제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현성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장이 참여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제주 취업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 과제로, ① 취업취약계층 여성의 발굴, 정책 참여, 통합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②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정책 확대, ③ 여성 취약집단의 고용정책 참여 시 종합적 서비스 제공, ④ 취약 여성 특화 프로그램 개발:공동작업공간 등, ⑤ 온라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⑥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여성 고용 서비스 체계 변화 대응, ⑦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성별 참여 통계 생산 및 효과성 분석 등의 연구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토론회를 추진한 김경미 의원은 "취업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실제 내용과 사업량, 전달 방법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은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도내 취업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도내 한부모, 결혼이민자,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특화된 취·창업 정책과 서비스가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도시위원회

# 제주형 악취관리 체계 구축 전문가 토론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주관으로 「제주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비를 위한 '제주형 악취관리 체계 구축' 전문가 토론회가 4월 27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종국 부장(한국환경공단)이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사례를 통한 제주형 악취관리 방안 모색'에 대해서 주제발표했다.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악취관리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에 의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이 확대되고 양돈장을 포함한 다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악취관리센터의 기능 및 역할 확장성, 그리고 안정적 운영 기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강진영 박사(제주연구원), 김석만 대표이사(태성환경연구소), 강명수 사무국장(대한한돈협회제주도협의회), 김시완 과장(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이 참여하는 지정 토론 및 종합토론을 진행했으며, 주제 발표를 한 이종국 부장을 포함한 토론자 모두 제주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안정적 제도 마련을 통해 제주악취관리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 지금보다 악취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 소방안전도로 확보 위한 간담회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은 5월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차 진입 도로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성의 의원은 "2017년 제천 화재 참사의 가장 큰 이유가 불법주차문제였다. 그 이후 관련 소방법이 개정되어 소방차 진입시 강제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현실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과거에 비해 차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주야간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라고 전했다.

제주도의 경우 소방청 기준 소방차가 진입곤란지역은 총 17개소(총 11,779m)이다. 그러나 제주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자체기준을 세워 장애물 제거시 통행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해 현재 21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현재까지 소방차 진입과 관련해서는 소방안전본부 자체 업무였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주야간 주정차 등 주차 문제와 연결되고 있어서 금일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에서는 화재 발생 때 소방차가 진입 곤란 사유로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제주에서 공공미술의 예술적 가치조명 운영관리 방안은?

## 제9차 제주문화누리포럼 전문가 토론회

제주문화누리포럼 제9차 전문가 토론회 '제주공공미술의 길을 묻다; 그 예술성과 지역성에 관하여'가 5월 2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대표 강민숙)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이 공동 주관했으며, 제주 공공미술의 운영방안과 가치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제발표는 ▲이승미 큐레이터의 '공공미술의 운영관리방안'이란 주제로 2020년 제주 공공미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미술의 관리체계를 제안했으며 ▲김기대 작가는 '제주 공공미술의 가치 조명'이란 주제로 지역주민들이 미술문화 향유를 증진시키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서 공공미술 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한 강민숙 대표의원은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서 문화도시 경관을 위한 공공미술이 갖는 의미는 사회적 가치로서 중요하다"며 "공공미술이 사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술적 가치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5월 21일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영희 의원 주최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김승배 과장, 경제정책과 하상우 과장, 방역대응과 황순실 과장,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동석 회장 외 부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침체된 관광산업의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영희 의원은 "지난 4월 제주관광협회를 방문하여 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침체된 제주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는게 오늘 간담회의 주요 취지이다."라고 하였으며, 건의된 주요 내용은 '패키지·단체 관광객 대상 방역지침 기준 완화', '호텔세미나 행사 참가자 식사 가능토록 기준 완화', '지자체 재난지원금 매출액 15억 까지 사업체 지급대상 확대', '관광업계 현장 종사자 우선 백신접종 요청'등이다.

오영희 의원은 "코로나19로 항공·여행업, 숙박·호텔업, 전세버스업, 관광지업, 기념품업, 외식업 등 주요 업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내여행 시장을 재편하는 기회."라며, "코로나 이전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국내여행 패키지와 호텔 상품의 등장 그리고 IT기반의 OTA(온라인여행사)들의 성장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시대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 발의

현길호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5월 26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주민과 행정이 참여·협력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디지털 지역혁신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민 주도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디지털 지역혁신 계획 수립 및 디지털 지역혁신위원회의 설치,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의 역할과 지역 전문기관 지정, 지역혁신사업 제안 등을 담고 있다.

현길호 위원장은 "디지털 지역혁신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제도화하는 등 법·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임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정부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디지털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 조례 발의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5월 25일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공간정보의 목록관리와 표준, 공간정보체계의 제공·보안관리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공간포털 접속은 2019년 6,040건에서 2020년 120,571건으로 약 20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공간정보시스템의 538개 레이어 중 공개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포털 레이어는 108개로 전체 레이어의 20% 수준이다.

홍명환 의원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통해 도민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공간정보의 접근성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간정보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위원회

# 의정자문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 제주교육청 IB교육 추진관련 의견수렴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5월 2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 위원, 의정자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교육분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박희순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제주교육청 IB교육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IB교육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자문을 들었으며, IB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들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자문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새겨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제주교육청 IB교육 추진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자문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새롭게 구성하여 2022년 6월 말까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현재 김종식 교육분과위원장(전 제주고교장) 등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 학교 내 만족도 높은 위탁급식 운영 방안 없나

부공남 교육위원장,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 김창식 의원(교육의원, 서부선거구),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5월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위탁급식 현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간담회는 도내 모든 학교에서 직영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따라 학교급식시설 공사 시에 학교에 여유공간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운영되는 위탁도시락 급식에 관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위탁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음식량 부족, 이물질 발견, 적정 온도 배식의 어려움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표, 도교육청 관계부서와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간담회를 주관한 부공남 위원장은 "도내에 위탁도시락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단 두 곳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오늘 제기되는 현안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탁급식 지원 단가의 현실화를 비롯하여 적정 온도 배식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채식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 토론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과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월 2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채식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2020년 12월 28일에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채식식단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이후, '채식의 필요성 및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조례 제정 등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의 일원이자 광주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했던 조명대 선생이 채식 국내외 사례를 발표하고, 안재홍 채식조례추진위원회 집행위원이 '채식하기 좋은 제주조례안'을 발표했으며, 김남훈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사무처장과 김란영 비건제주 대표, 교육청과 도청의 담당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민구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후위기의 현상에 대한 위기감들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의 하나로서 채식 식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소개

# 4·3평화교육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

## 강철남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17일에 대표 발의 하였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4·3평화·인권교육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6월 시행을 앞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 때 맞춰 조례가 개정되게 되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오는 제395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4·3평화·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4·3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훈을 함양하여 미래 제주인으로서 4·3화해와 상생정신을 조화롭게 계승·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경미 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월 17일,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현행 일자리혁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및 '사회적 기업 분과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현황의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고 3년마다 분석하여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경미 의원은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운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하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학교 기록물 보전지원 조례안

## 강시백 교육의원

강시백 교육의원(사진·서귀포시 서부)은 학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 기록물 보존시설을 설치하고 보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도교육감은 학교의 행사, 시대적 상황 등을 보여주는 기록물, 학교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 등과 관련된 기록물, 교육적 활용가치가 있는 학교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강시백 교육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체계를 구축하여 도민과 학생들이 기억하고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인력 등 지원 조례안

## 양영식 위원장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연동)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근무환경개선, 교육·훈련지원,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지원, 보건의료인력 장기근속 유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영식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소진과 이탈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의 타 지역 유출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은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이 보건의료인력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나아가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도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

## 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지역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증진과 교통안전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5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 운영계획 수립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 자전거 타기 교육 및 홍보 △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고 있다.

홍명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 도청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실질적인 자전거이용에 대한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고태순 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시한 시설 외에 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관련 시설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과 도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해 교통상의 위험요소 등을 저감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태순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교통안전 시설 설치사업이 예전보다 다양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노인 보호구역의 경우 법에서 명시한 지정시설 외 조례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인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명예회복 지원 조례안

##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월 11일 대표발의했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3월 26일과 4월 26일 2차에 걸친 정책간담회와 4월 29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강광보 할아버지의 '수상한집'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였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토론회

# 제주형 스마트관광 도입, 제주형 마스 왜 필요한가

## 제주관광 미래성장포럼 제5차 토론회

제주관광 미래성장포럼 대표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5월 12일 소회의실에서 제주관광 미래성장 포럼 5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영희 대표는 "'제주형 스마트관광 도입 및 발전전략 : 제주형 마스(MaaS)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5차 정책토론회를 갖게 되었다."며, "스마트관광도시 수립을 위한 제주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공공주도로, 도민과 관광객의 다양한 교통 니즈를 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파편화된 정보를 분석하여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주형 마스(MaaS)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주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이 '제주형 스마트관광 도입 및 발전전략 : 제주형 마스(MaaS)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토론자로는 제주대학교 관광융복합학과 양성수 교수,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 고선영 센터장, 제주관광협회 e-커머스사업부 김철휘 부장, (사)제주ICT기업협회 오태헌 협회장이 참여했다.

# 치매관리사업 활성화 위한 정책 토론회

홍명환·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27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도내 치매관리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차후 보다 타당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발표는 ▲ 박경희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이 '제주 치매관리사업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이은주 대구 기억학교협회 회장이 '경증치매노인 대상 치매관리사업 강화 방안'으로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한지영 서귀포시 서부치매안심센터 팀장, 김경애 (사)치매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이사장, 이광홍 대구광역시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팀장, 이혜숙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방역대응과 민원상담팀장이 참여했다.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6천명, 치매유병률은 11.21% 정도이며, 앞으로 치매추정환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앙정부 정책기조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현재 제주도에도 광역치매센터 및 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환자 상담과 검진, 인지재활 프로그램,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의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본 토론회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센터 등의 사업 보완 방안과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토론회를 추진한 홍명환 의원은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실제 내용과 사업량, 전달 방법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은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도내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도내 치매관리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공청회

송창권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5월 11일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김장영 교육의원 제주시중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어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제주어교육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제주이해교육과정 중 '제주의 말과 글' 영역에서 제주어 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활성화 방안을 조례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김장영 의원(제주교육발전연구회 대표), 송창권 의원(제주교육발전연구회 간사),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양창용 교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용관 과장,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 사) 제주어보전회 이종실 이사장, 세화중학교 송시태 교장, 제주CBS 보도제작국 김대휘 국장, 제주자연사박물관 김완병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제주어 교육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교육과정 및 제주이해교육과정 적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양창용 교수가 발제했다.

## 함께합시다

**신기한 제주어 ❺**

# 제라ᄒᆞ다

**(형용사) 떳떳하다. 품위와 격식이 갖춰지다**

**<예문>**

가당오당 젱기가 돌에 걸려신고라 부룽이가 앞더레 나사질 못ᄒᆞ영 장석을 ᄒᆞ여가민, 주연이 젱기를 심껏 밀려주거나 넘이 큰 돌이민 젱길 잡아둥경 그 돌을 그냥 넘어사곡 ᄒᆞ엿주. 부룽이가 지쳐가민 청촐 확확 비여당 "마 이거 먹엉 심내라" ᄒᆞ곡 ᄒᆞ난, 부룽이는 지친 것도 이ᄌᆞ불고 ᄎᆞᄎᆞ 제라ᄒᆞᆫ 밧갈쉐가 뒈어갓다.

'도의회 광장'에서는 2021년부터 양전형 님의 '제주어용례사전①'에 실린 제줏말이 600여 예문 속에 쓰이는 용례를 게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당오당 : 가다오다
걸려신고라 : 걸린 모양인지
앞더레 : 앞으로
나사질 : 나서지를
못ᄒᆞ영 : 못하고
장석 : 힘들어 끙끙거리는 소리
ᄒᆞ여가민 : 하기 시작하면
주연 : 주인
심껏 : 힘껏
넘이 : 너무
돌이민 : 돌이면
잡아둥경 : 잡아당겨서
넘어사곡 : 넘어서고
ᄒᆞ엿주 : 하였다
확확 : 재빠르게 얼른 얼른
비여당 : 비어다가
ᄎᆞᄎᆞ : 차차
제라ᄒᆞᆫ : 떳떳한
밧갈쉐 : 밭을 가는 수소
뒈어갓다 : 되어갔다
마, 마아 : 손아랫사람에게 '자 받아라'의 뜻
마 이거 먹엉 심내라 : 자 이거 먹고 힘내라

## 청탁금지법 Q&A

청렴실천 당당대한민국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돼요

**Q**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은 공직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와 반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 금지 금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고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A**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

한편,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따라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 월별 | 회수 | 회 기 | 의사일정 | 주요처리안건 |
|---|---|---|---|---|
| 계 | 10회 | 총137일<br>· 정례회 2회/47일<br>· 임시회 8회/90일 | 본회의 28일<br>상임위 55일<br>예결위 19일<br>공휴일 35일 | |
| 2월 | 제392회 임시회 | 2.22.(월) ~ 3.4.(목) (11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6일<br>공휴일 3일 | · 교섭단체 대표 연설<br>· 결산검사위 원 선임<br>· '21년도 주요업무 보고<br>·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 3월 | 제393회 임시회 | 3.17.(수) ~ 3.25.(목) (9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5일<br>공휴일 2일 | · 조례안 등 안건 처리<br>· 현장방문 등 |
| 4월 | 제394회 임시회 | 4.20.(화) ~ 4.30.(금) (11일) | 본회의 6일<br>상임위 3일<br>공휴일 2일 |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br>· 조례안 등 안건 처리<br>· 현장방문 등 |
| 5월 | 제395회 임시회 | 5.28.(금) ~ 6.9.(수) (13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4일<br>예결위 3일<br>공휴일 4일 |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br>· 조례안 등 안건 처리<br>· 현장방문 등 |
| 6월 | 제396회 제1차 정례회 | 6.15.(화) ~ 6.30.(수) (16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5일<br>예결위 5일<br>공휴일 4일 | · 결산 및 예비비 승인<br>· 조례안 등 안건 처리<br>· 현장방문 등 |
| 7월 | 제397회 임시회 | 7.14.(수) ~ 7.21.(수) (8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4일<br>공휴일 2일 | · 조례안 등 안건 처리<br>· 현장방문 등 |
| 9월 | 제398회 임시회 | 9.7.(화) ~9.14.(화) (8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4일<br>공휴일 2일 | · 조례안 등 안건 처리<br>· 현장방문 등 |
| 10월 | 제399회 임시회 | 10.12.(화) ~11.3.(수) (23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15일<br>공휴일 6일 | · 행정사무감사<br>· 조례안 등 안건 처리<br>· 현장방문 등 |
| 11월 ~ 12월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 11.15.(월) ~12.15.(수) (31일) | 본회의 6일<br>상임위 8일<br>예결위 9일<br>공휴일 8일 |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br>· 2022년도 예산안<br>· 조례안 등 안건 처리<br>· 현장방문 등 |
| 12월 | 제401회 임시회 | 12.17.(금) ~12.23.(목) (7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1일<br>예결위 2일<br>공휴일 2일 |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br>·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 13일

## 제주도-제주도의회-제주도교육청
## 백신 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동담화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년 5개월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방역에 협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불편을 견디며 배려와 희생을 실천해주시는 도민 한 분 한 분이 '안전 제주'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어두운 코로나 터널의 끝이 아직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주는 대규모 관광객이 다녀간 뒤에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600명대 안팎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센 변이 바이러스도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 도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해 왔고, 방역 점검과 단속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신 것처럼 대응 조치만으로는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 코로나 감염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뿐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예방효과가 8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종대상 도민의 70%인 40만 2,580명이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 위험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대상 도민의 약 10%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인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접종을 기피하거나 고민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접종 후 이상 반응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가급적 많은 도민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환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은 고령층의 접종률이 높아야 합니다.

예약 시스템 접근이 어려워 미처 예약을 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도록 6월 3일까지로 예정된 접종 예약과 그에 따른 접종 기간을 연장해주실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 드립니다.

도민 대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일상생활에서 제약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모두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고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활기차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백ㅋ신 접종은 일상 회복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함께 백신 접종 예약이나 정보 전달 과정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직접 살피고,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일상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전 도민께서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5.28.

의원 기고

## 원도심, 종합적 도시관리체계 필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전격 추진되고 있다.

49억원을 투입한 칠성로 아케이드 조성, 수십 억원을 들인 동문시장과 칠성로 공영주차장 건설, 2000년 이후 십여 차례 실시한 용역은 물론 2008년 원도심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재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의 이유로 3년 만에 백지화됐다. 842억원을 들인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등 매년 수백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상권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도시공동화도 막지 못했다.

이에 2016년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야심찬 추진 의지로 제주시 원도심도시재생사업이 2020년까지 약 5년간 2500억원 내외의 국비로 지원된다고 발표되자 우리는 환호성을 울렸었다.

원희룡지사는 역사문화도시, 문화관광도시, 자연친화도시, 사회경제도시 등 4개 비전을 내걸면서 관덕정 광장 및 서문광장 복원사업 추진과 더불어 원도심 일대의 부동산 광풍을 우려해 전체적인 고도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아울러 제주의 정체성, 경관, 주민의 이익 최대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딱 만 5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 원지사의 행정철학은 온데간데없이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바로 제주시 녹지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등봉공원에 대단지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다. 제주시민의 한라산 조망권을 막고 청정한천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상하수도의 문제까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제주시민의 공감대 형성 과정없이 속전속결식으로 강행되고 있다.

부동산 광풍을 운운하며 원도심의 정주 인구유치 정책에 소극적이었던 원도정이 불과 5년도 되기 전에 부동산 광풍을 더욱 부채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2018년도에 5년간 9500억원을 투자해 도시공원 모두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도민과의 약속을 뒤집어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개발 사업자의 초등학교 기부채납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원도심 학교이다. 최근 신입생이 10명 이하일 때도 있었는데, 오등봉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되고 원도심의 인구 유출도 불 보듯 뻔하다. 결국 학생수 급감으로 초등학교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고 이는 인구 유출로 이어져 원도심의 쇠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간 원도심 재생을 위해 수십 년동안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 정작 원도심의 공동화로 이어지는 도심 평면 확장 개발사업을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원도심의 문제는 원도심 자체로 접근해서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는다.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도시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살고 싶은 주거시설이나 문화예술을 즐기는 곳이 전제돼야 하고 도심 기능의 구조조정이나 기반시설의 노후화 개선은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과 도시의 모습을 그릴 때에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도시관리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왜 항상 원도심 재생 문제가 제1의 화두가 되는지, 책임있는 행정과 정치가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민구** 부의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학교 급식,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해야

지난 1983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었다.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과 식생활교육, 급식의 위생과 안전 등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왔다. 급식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보릿고개까지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성장에 필요한 필수영양 공급이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본다.

우리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조례'와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교 급식을 지원해 왔으며, 2012년에는 앞선 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 조례의 목적은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제주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효율적인 수급체계와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학교급식은, 단순히 학교에서 급식한다는 논리적 의미만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활동을 통한 급식과 개인의 균형적 영양 관리측면, 각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경제성과 국내산 식재료의 안정적인 소비처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 사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스쿨밀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교급식에 인정받은 유기농제품이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농장과 학교 연결프로그램으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지산지소 급식 메뉴 콘테스트'와 '학교급식 식자재 이용 학교 모델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친환경 급식 식재료 중 제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과 학교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알 수 있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고,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면서 물류비 부담 해소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산한 농산물이 급식에 사용된다면 최고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건강을 확보함을 물론 농촌과 지역 농가를 살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강성균**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가정의 달, 청년이 설 자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 어버이, 스승, 성년, 부부 등 5월에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 뜻을 기념하는 '날'들이 많다. 한 사람이 나고 자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소임을 해내는 역할들을 특별히 기념하는 날이 한데 모여 있기에 5월의 별칭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인 5월 달력을 보고 있자니, 성년을 지나, 비혼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생각까지 닿았다.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온 N포세대, 니트(NEET)족 등의 신조어를 생각해본다면, 기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당당하게 설 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N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에 이어,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내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니트족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또는 Training'의 약자로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들을 일컫는다.

이들을 위한 정책의 첫 번째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인 바로 '주거'이다. 행복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 중이긴 하나 여전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고, 수도권 지역에 유학 중인 제주 학생들을 위한 탐라영재관 또한 입소 경쟁률이 높아 2021년 기준 1.8:1에 이른다. 내몸 하나 누일 곳을 찾는 어려움은 학생이나 취준생이나 직장인이나 청년들에겐 매한 가지인 현실이다.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필자는 지난 제38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월세지원' 등 주택 공급형 정책의 다변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탐라영재관의 경우에도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닌 대학 근처 소규모 하숙형 기숙사 형식의 쉐어하우스 등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두 제안 모두 다행히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모든 정책의 실현에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챙겨할 것들이 많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나, 또 못할 것도 아니기에 힘을 내어 본다.

N포세대, 니트족을 하나로 묶는 세대용어가 '청년'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김황국**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의정자문위원 역할 충실히 이행할 터

### 운영방향·활동계획 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30일 오전 10시 박경린 의정자문위원장, 강지언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9월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그간의 활동내용과 성과 보고, 그리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통해선 참석한 의정자문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이 있었다.

도의회는 그간 의정자문위회의 각 분과위원회별 활동과 현안사항 자문 그리고 정책 방향성 제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의정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의정발전 더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제주계정·특행기관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

### 제주재정의 효율성과 안정화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송재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제주재정의 효율성과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5월 12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의원, 재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재정특례의 강점이 갈수록 축소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균특에서 제주계정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우선 균형발전관련 신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미흡하였고, 공모방식의 지역지원계정보다는 지역에 배분된 예산 하에서 기존사업을 수행(포괄보조금 방식)하는 지역자율계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집행부는 제주특별법과 재정특례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모방식의 지역지원계정 비중을 확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 지방의회 부활 30년,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

### 「조례 50선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오는 7월 1일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중 도민의 삶을 변화 시킨 조례 50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5월 21일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 선정위원회」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때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의회(1991년~2006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2006년~2021년 현재까지)에서 심사하여 제·개정된 조례 중 분야별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준 조례 50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에 선정될 조례 50선 책자를 발간과 배포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조례선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시연 위원장은 "조례 50건을 선정하는 막중한 역할에 책임감이 앞선다"며, "조례의 선도성, 도민사회 파급력, 완성도, 지속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 업무협약

###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 계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주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30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향후 3년간 주요사안 공동연구, 정책관련 정보교환,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번째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이미 2017년 협약을 맺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정책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국회의 핵심적인 입법정책 지원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이번 협약은 지난 협약을 통해 이룬 성과와 상호 신뢰를 이어감으로써 제주도의회가 타 지역 의회를 선도하는 자치입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국회 입법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소통창구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좌남수 의장은 체결식에 앞서 가진 차담회와 인사말씀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하여 바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최우선적으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소송에서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제시, 어업인 피해보상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 등 제주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 의사당 로비 도민카페 오픈

### 도민 소통과 기자회견 장소 탈바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사당 로비에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도민 등 방문객과 직원들을 위한 소통·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5월 20일부터 카페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페운영은 도내 장애인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지원 등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맡게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니저(비장애인) 1명과 장애인 4명이 오전·오후 2명씩 교대근무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도민의방 기능 유지 차원에서 기자회견(브리핑), 토론회, 간담회 등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운영시기는 차후 공지할 계획이다. 운영(개방)시간은 평일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코로나19 상황 호전시 연장 등 재조정할 계획이며, 신청방법은 사용예정 24시간 전까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오픈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도민들과 더욱더 소통하는 따뜻한 의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